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문화 조성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26년 1차 노사협의회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2026년 1차 노사협의회 결과

<학교지원과 공무원단체담당>

1 총괄

□ 협의회 개요

- (일시) 2026. 1. 28.(수) 17:00~
-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행복지원동 3층 301호 대회의실
- 참석자(12명)
 - 교육청(6명):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급식담당·인사담당·조직담당·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
 - ※ 각 안건별 업무 담당자는 별도 배석
 - 노동조합(6명): 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김중형(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김두리(의성초등학교), 최성열(꿈빛유치원)

□ 협의 안건(총 12건)

연번	안 건 명	주관 부서
1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	총무과
2	[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게시판 신설]	미래교육정보과, 총무과
3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 수당 지급]	기획예산관, 행정과
4	[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	체육건강과
5	[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실시]	총무과
6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	행정과
7	[단체협약 이행 요구]	학교지원과, 행정과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총무과
9	[운전직렬 상위직급(6급) 정원 증원]	행정과
10	[급식차량관리 규정 제정 및 급식차량 운용 수당 지급]	체육건강과
11	[퇴직(예정)자 정밀 건강검진비 신설]	학교지원과
12	제안[급여 우수리 기부]	학교지원과

2

협의 안건 및 협의 결과(상세)

안전 번호	안 건(요구 사항)	협의 내용
1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다양한 도서 구입 및 체험학습, 직무 능력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 경비, 자기 계발 목적의 학원 교육비·교재비 등) ○ 자율연수비 내 ‘독서지원비(10만원)’ 세부항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시, 무분별한 자율연수비 신청 가능성 있음. ☞ (독서지원비)기존 자율연수비 지원항목 및 내용과 중복됨.
2	[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게시판 신설]	
	○ 업무용 메신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단체나 목적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 ☞ 업무용 메신저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안내받는 것에 사용자 불만 사례가 다수 있음. ☞ 대규모 쪽지 발송 시 시스템 성능 저하와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
	○ K-에듀파인 내 노동조합 게시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내부메일)은 특정 단체·동호회 운영 홍보를 위한 내부메일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업무관리를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 단체나 목적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
3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구성, 회의록 등 실질적 업무를 간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토록 함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간사업무활동 경비 지급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에는 해당 수당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상위 법령·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업무 활동 경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 경비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
4	[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	
	○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 조리원을 본청 체육건강과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에 전문성을 가진 직렬로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데는 그 직무의 적합성이 낮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안건 번호	안 건(요구 사항)	협의 내용
5	[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방학 중 행정실의 재택 근무 실시로 일·가정 양립 지원 ○ 학교 업무공백 방지 범위 내 희망자 중심·자율 시행 (사례: 경기도·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현장 필수업무의 공백 방지, 민원 발생 사전 차단 및 학교 근무자의 직종별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현행 오프라인 근무 유지가 필요.
6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급 이하 및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안 개정 추진 ○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간 업무량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 ○ 시설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관리 행정사무업무가 가능한 시설 관리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표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반(TF) 운영,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내 업무분장 표준안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7	[단체협약 이행 요구]	
	○ 반기별 이행 결과 통보 (협약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위원장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연 1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함. ☞ 반기별 이행 결과 요구 시 반기별로 노동조합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시 사전 협의 이행(협약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직 공무원 일몰제 - 직영 통학차량 임차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은 정책 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감의 입법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것임. ☞ 다만,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협의 추진.
	○ 노사교육 현행 지속 시행 (협약 제5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연수를 사용자인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의 소지가 있음. ☞ 그동안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노사관계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으나 노사관계 교육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안전 번호	안 건(요구 사항)	협의 내용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필수보직기간: (기존) 1년 6개월 → (변경)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1년 ○ (제13조의3)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 ①항2호마목 : “교육행정 이외의 직렬에 해당하는 자” 삭제, ②·④항: 포항·구미교육지원청에 한하여 본청과 동일한 전보 기준 적용 ○ 일몰제 적용 “조리직렬” 전보 기준 별도 마련(연고지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배치를 희망하나, 생활근거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필수 보직기간 단축은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청 근속제한을 없앨 경우 특정한 장기 근무에 따른 학교 근무자의 지원청 근무 기회 차단, 승진·보직 기회 제한 등 인사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음. ☞ 휴직자 복직 시 전보서열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휴직 당시 학교·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휴직(6개월 이상) 시 결원을 둘 수 없으므로 즉시 보충함에 따라 휴직 당시 학교·지역에 복귀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9	[운전직렬 상위직급(6급) 정원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직렬 6급 및 7급 정원 확대 ○ 임차 비율 축소 및 운전직렬 신규 채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7. 1.자 정원 조정 시 증원 예정. ☞ 학생 수 변동·결원 대응을 위해 임차 기조 유지가 타당하며, 운전직 신규채용은 임차전환 계획과 정·현원 및 퇴직(예정)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
10	[급식차량관리 규정 제정 및 급식차량 운용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차량 운영 운전직 공무원 수당 지급 ○ 급식차량 운영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보수업무 처리 지침」 등 상위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업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급식 운반 업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조리교·비조리교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은 학교별 업무분장 및 운영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퇴직(예정)자 정밀 건강검진비 신설]	
	○ 퇴직(예정)자 정밀 건강검진비 100만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과도한 교육재정 소요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12	제안[급여 우수리 기부]	
	○ 매 월 개인 월급여액의 1,000원 미만 우수리 금액을 기부	☞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주관 부서 선정 및 타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등 추가 검토 후 사업 추진.